

北, 55일 만에 남북통신선 복구... “선부른 기대감 금물”

김정은 위원장, 복구 의사 닦새 만
韓해군 경비함 시험통신엔 무응답
낙관적으로 볼 수 없어... ‘신중론’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지난 8월10일 단절됐던 남북 군통신선이 약 55일 만에 다시 연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복구 의사를 밝힌 지 닦새만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복구했던 군통신선을 한미연합훈련을 핑계삼아 남북대화 무산을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며 군통신선을 단절한 북한이기에 ‘꼼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남북 통신선 정상화, 선부른 기대감은 경계해야

국방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다”면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 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



남북 군통신선이 복원된 지난 7월 27일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통신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 다만 한국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 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북 군통신선 복구에 대해 차분한 입장을 보인 국방부와 달리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는 눈치다. 통일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의 기대만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에 앞서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중의 항공기 등을 무력화하는 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9월 30일)을 공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에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날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北, 책임 떠밀며 ‘이중 잣대’ 철회가 목적?

북한은 남북대화를 반기는 반응과 함께 무력시위를 병행해 왔다. 지난달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철도기동미사일체계, 28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북한은 연례적인 방어성격의 한미 연습을 등을 꼬투리 잡아, 남북대화 무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라며 반발해 왔다.

남북 군통신선 복구 하루 전인 3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에 반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 시험들에 대해 함구하면서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결코 건드릴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미뤄볼 때, 남북·북미대화에서 유리한 대화카드를 쥐면서 자신들의 향후 군사행보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북통신선을 복구시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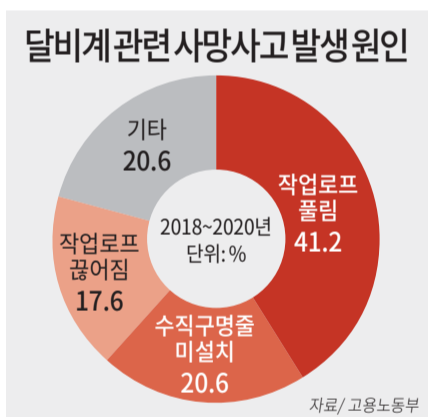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노동자 ‘달비계’ 위험경보... 뒷북대책 도마위

외벽작업 도중 추락사, 9월에만 2건
고용부, 두 달간 추락위험 경보 발령

최근 건물외벽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달비계(간이의자)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노동자가 주로 달비계에 앉아 외벽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만 노동자 2명이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총 1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잇달은 추락 산재 사망사고에 정부의 뒷북 대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두 달간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해 전국 현장에 작업 로프(줄) 결속상태 확인 등 달비계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들어 아파트 등 건물외벽 작업 중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는 모두 12건이다. 지난 달에만 달비계에 앉아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는 업체가 보조 줄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달비계에만 의존하다

발생한 사고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노동자들은 주로 밧줄을 매단 간이의자에 앉아 작업하는데 영세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이 다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6월 총 10건이 발생한 달비계 사망 사고는 7~8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후 9월 들어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비계 관련 사망 사고자는 2018~2020년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가을인 11월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이달 가입

근로복지공단, 한 달간 집중 홍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달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산재보험은 1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를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가입 사업장이라면 노동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한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세종=원승일 기자

제비뽑기로 아파트 공사 입찰담합 과징금

낙찰 예정자 사전 합의

소방전기공사 업체들이 약 7년간 아파트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담합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등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에 참여한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등 13개 건설

회사가 2011년 5월~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04건의 입찰 평균 계약 금액은 8억 6300만원으로, 총 계약 금액은 2623억 9900만원 규모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존슨컨트롤즈 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펜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시스템, 프로테크, 씨엔이지에스, 새솔방재, 삼성방재, 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 오성소방, 케이텔, 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엔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테크

다. 이 가운데 우창하이텍은 이 사건 담합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소방전기공사 업체들은 13개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로 해당 기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이용해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롯데건설이 발주한 광명아울렛 등 16건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건설사 한라가 시행한 송도현대아울렛 등 4건은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낙찰 순번은 업체별 낙찰 누진액, 영업 노력,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기설비기술기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일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국민 안전 등 긴급을 요하는 신기술을 적기 도입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긴급을 요하는 안전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우선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직용 타당성, 기술적 적

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을 심의·의결기구인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 기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